

위기의 광주비엔날레

1 '미술권력'으로 변질된 이사회

달힌 시스템... 토론·비판 실종

광주비엔날레가 신정아(35) 공동예술감독의 가져짜워 과묵으로 창설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검증시스템 부재를 드러내는 등 아시아 최고의 미술이벤트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신정아씨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재단의 구조적인 모순과 개선 방향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당연직 이사 대부분 非전문가... '종신직' 부작용 '신정아 감독 파문' 책임 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회는 비엔날레 재단의 행·재정적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단의 조직, 인력운용, 정책적 판단, 감독 선임 등 재단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미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재단의 개혁이나 비전을 창출하지 못함에 따라 끊임 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선임 철회 파문에서 보듯이 이사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비엔날레 재단 이사회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적 구성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 재단 이사는 모두 27명으로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등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고와 인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이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단 이사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토론 대신 '동의', '재청' 등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비엔날레의 올해 처음 도입된 공동감독제도 비엔날레의 성과를 좌우할 주요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이사회를 통한 의결대신 서면결의로 처리되는 등 졸속행정으로 이뤄졌다. 특히 3월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의 연임규정을 철폐, '이사 종신제'를 도입한 것은 이사회의 폐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더욱이 당시 이사회에는 연임제한(임기2년, 2회까지만 연임가능)에 걸려 이사회를 내놓아야 하는 4명의 이사들까지 참석, 자신들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바꾸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유능한 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사 종신제'를 도입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새롭고 유능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길이 차단 돼버렸다는 것이다. 재단이사회가 이처럼 배타적 폐쇄구조로 변질되는 동안 신정아 사건이 터진 것이다. 미술계에서는 재단이사회가 '생산적인 조직'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정아씨 '가짜 학위' 진상 주증 윤곽

신씨 12일 귀국후 잠적... 동국대 진상조사위, 출석 요구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배경 18일 공개"

신정아(35) 동국대 조교수의 가져짜워 학위를 둘러싼 진상조사가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동국대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말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신씨에게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져짜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진

이에 따라 동국대는 가져짜워에 관한 신씨 본인의 소명과 거짓 확인 팩스를 발송하게 된 예일대 측의 해명이나오는 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태를 수습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국대는 이번 문제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학 자체조사 만으로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관계자는 "예일대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니 경찰 외사과의 도움을 요청하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면서도 "황우석 사건 때 검찰이 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 사회가 대학의 특수성을 존중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비엔날레 재단 한갑수 이사장은 15일 "오는 18일 긴급 이사회에서 신정아 전 감독과 관련된 선정위 투표 결과와 감독 선정배경에 대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3차 선정위에서 후보에 오른 3명 가운데 신씨가 선정된 배경에 대해 나머지 두 사람의 명에 때문에 밝히지 않으려 했으나, 이를 둘러싼 외압설 의혹이 증폭돼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신씨가 1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1인 2표로 방식으로 투표한 2차 선정위 투표 결과 (신씨는) 3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범여권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진평화연합 광주·전남본부 출범식에 참석, 회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손학규, 광주·전남 지지모임 '선진평화연합' 출범식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5일 "현재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일대일 대결에서 뒤지지만 본선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진평화연합 광주·전남 출범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온건·합리주의적 중도세력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선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의연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전남에 대한 공약'과 관련, 손 전 지사는 이어 "아직은 구체적 공약을 발할 단계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광주·전남지역은 더 이상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영산강 개발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 등을 약속했다. 손 전 지사는 열린우리당 해체론 논란에 대해 "작은 차이를 뒀고 큰 틀에서 대통합하는 게 대통합의 기본 정신이다"며 "범여권 통합도 국민대통합의 첫 단추이고 범여권 통합이 기본 여권을 열기설기 재구성하는 것이려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므로 더 큰 틀의 대통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외국 유학 중이었다는 이른바 '현장 부재론'에 대해 "분노와 아픔의 현장에 없었던 것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유신시절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5월 광주정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진평화연합 광주·전남본부 출범식에는 이홍길 5·18 기념재단 이사장, 강기정·김동철·김성근·김태홍·지병문·최인기·신학용·안영근·한강원 의원,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김성숙·손재홍 광주시의원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선진평화연합 광주·전남본부는 ▲상임대표에 김국영 전남대 총동맹회장, 김성복 침묵천소년회 광주·전남지회장, 김재근 전 광주북구청장이 ▲공동대표로는 강기석 광주서구의회 의장, 김상용 광주북구의회의장, 김준태 시인, 이돈홍 서예가 등 10명 ▲고문으로는 노상계 조선대 교수, 문형섭 전남대 교수, 오병문 전 교육부장관, 이정일 전 광주서구청장, 장두석 배달문화선양회장, 여연스님 등 31명 등을 각각 선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범여권 내달 19일 전후 '컷오프' 후보군 압축

경선추진협의회 규칙 합의 10월초 최종 대선후보 확정

범여권이 한나라당 경선일인 8월19일을 전후로 오픈 프라이머리의 1차 관문인 '컷오프'(예비경선)를 실시해 최대 8인 이내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빠르게 10월초 대선후보를 확정할 전망이다.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는 지난 12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한명숙·김혁규·천정배 의원, 김두관 전 행사장관 등 예비주자 7인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불 미팅"을 갖고 이 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범여권 주자가 난립, 컷오프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으며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8

월19일 직전'(1인)과 '8월19일 직후'(2인)를 놓고 의견이 갈려 최종 결정은 국경추에 위임하기로 했다. 본경선 시기도 '9월8일~10월7일'(1인), '9월15일~10월14일'(2인)이 제시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본경선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순회투표를 실시하고, 제주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끝난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의 방식을 준용하되 시간의 촉박성을 감안, 일부 광역화하는 쪽으로 의견집적이 이뤄졌다. 컷오프 방식은 ▲여론조사 ▲여론조사 및 예비경선인 단 투표 혼용 등 2~3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변별력 문제 때문에 혼용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국경추는 컷오프 및 본경선 방식, 선관위 위탁 여부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8일께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모이는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주자들이 합의된 뒤 발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 조이트레블, featuring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central banner for '장사(장가계) 판매대행' and several columns of property details with photos and prices.